

월요광장

삶은 직선이 아니다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

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은 시골보다 도시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특히 공황장애를 비롯한 각종 불안 장애는 더욱 더 그렇다. 왜 도시에서는 정신질환의 발병률이 높을까? 왜 도시인들은 더 불안할까? 밀집된 공간, 경쟁과 비교, 범죄, 외로움, 자연과의 단절, 소음과 각종 공해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런데 학자들은 또 하나의 이유로 직선의 건축물을 든다. 즉 도시인들은 매일 수많은 직선과 모서리들에 노출됨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첨단공포증’(尖端恐怖症)이라는 불안 장애가 있다. 이는 가위, 칼, 유리 조각, 책상모서리 등 날카로운 물체나 부분을 보면 심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부엌칼은 물론이고

젓가락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일부는 과거에 날카로운 물체에 다쳐서 크게 놀란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뚜렷한 사건이나 사고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포증이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은 날카롭고 직선적인 것에 대한 불안과 혐오를 가지게 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에서 날카롭고 직선적인 것은 이빨, 뿔, 가시, 발톱, 절벽 등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뇌를 촬영해 보면 일반인의 경우에도 뾰족한 모서리를 가진 사물을 볼 때에는 곡선의 물체를 볼 때보다 위협을 지각하고 반응하는 뇌의 편도체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직선을 싫어하고 곡선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취향인 것이다.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이는 오스트리아 건축가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의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A4 용지 위에 자를 대고 그릴 수 있는 직선은 자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듯한 세모나 네모, 육면체 등은 눈을 찡고 찾아봐도 자연에는 없다. 굽은 선과 몽둥그러진 네모나 세모, 그리고 비뚤비뚤한 동그

라미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이 사는 곳은 자연과 유리된 도시이다. 아침이면 직육면체의 아파트에서 나와 직선의 도로를 통해 직육면체의 건축물로 이동하여 직사각형 책상에 앉아 매일 생활한다. 도시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직선과 그 선과 선이 만들어 내는 날카로운 각이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는커녕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일까? 우리의 생각과 관계와 삶도 점점 직선을 닮아가고 있다. 직선형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어디를 가더라도 직선의 최단거리를 계산하고, 앞만 보고 간다.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처럼 삶에서 늘 목표를 중시한다. 결국 직선적인 삶이란 결과 지향적이다. 이들에게 계획대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직선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고통이다. 이들은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위기에 대한 유연한 대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갖기 어렵다. 직선에서 벗어나는 일탈이나 우회, 그리고 기다림을 자주 실패, 비효율 그리고 손해로 느끼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도시의 직선형 인간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율적인 것처럼 보인다.

인간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직선형 인간은 시시비비를 정확히 따지고, 돌려야 가지지 않고 좋고 싫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빨리 결론을 맺거나 해결을 보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 방식은 우리가 정작 바라는 친밀함과 연결감을 줄 수 없다. 결국 시시각각 변하고 다차원으로 이루어진 현실 세계에서 직선형 인간은 길을 잃고 좌절하게 된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도시는 이제 곡선으로 변모해야 한다. 그 옛날 한국의 바선코, 초가집, 향아리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자연스러운 곡선이 이제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새롭게 재탄생되어야 한다. 우리의 관계는 직선과 곡선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할 말은 하지만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며 부드럽게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곡선의 궤적을 회복해야 한다. 막히면 돌아가고, 웅덩이가 나타나면 이를 먼저 채우고, 다른 물줄기와 만나 더 큰 흐름을 만들어 드넓은 바다로 가야 한다. 마치 순천만으로 굽어져 흘러 들어가는 동천처럼.

社說

돌아온 안철수 새 대표, 뼈를 깎는 자세로

대선 패배 후 사실상 집거에 들어갔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신임 당 대표로 돌아왔다. 어제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51.09% 득표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 안 대표가 당 대표 선출에 대해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9 대선 패배로 박지원 전 대표가 물러난 지 110일 만에 국민의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지도부를 구성하게 됐다. 2019년 1월 가까이 임기인 안 대표 역시 정치 전면에 복귀하면서 국민의당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당당의 길, 단단한 대안 야당의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대표가 밝힌 선명한 ‘대안 야당’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의 운영을 결정지를 지방선거가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며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사건으로 창당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당 지지율을 높임과 동시에 당내 통합을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선 때에 선거대책위를 비롯한 당내 조직의 소통 및 조정 능력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고, 제보 조작 사건으로 당의 역량마저 의심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선 직전 사드 배치 당론이 바뀌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준 점도 있지 않아야 한다.

안 대표는 대선과 당 대표 선거 등 선거를 치르는 데 집중했던 당력을 시스템 개혁에 쏟아 부음으로써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과 쇄신을 이뤄야 한다. 우선으로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원내 제3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켜야 한다. 안 대표와 새 지도부는 국민의당만의 선명한 정책을 발굴하고, 호남 정당으로서 지역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5·18 진상 규명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과 헬기 기소조사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단을 꾸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발표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등 핵심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30여 명 규모의 특별조사단을 꾸려 오는 9월 초부터 3개월여간 당시 헬기 사격과 공군 출격 대기 태세 주장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대한반협이 추천하는 명망 있는 인물에 맡기고 위원은 광주시가 추천하는 민간인 등을 포함해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전군에 “5·18 관련 군 문서를 함부로 폐기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5·18 단체들과 광주 시민들은 이러한 국방부의 달라진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면서 과거처럼 융투사미로 끝나

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특별조사단을 지휘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하는가 하면 전투기 출격 대기에 대해서도 “꼭 광주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밝혀 의구심을 키웠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을 지닌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은 국회와 대법원 등에서 추천한 인사 15명으로 정부 내에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적인 진상 규명 요구에 화답해야 할 차례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른 야당을 설득해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변호사가 바라보는 금호타이어 매각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걱정이다.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된 기사를 볼 때마다 그렇다. 광주의 변호사로서 부디 금호타이어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온전히 안정적으로 고용되길 바라고 금호타이어가 광주를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더블스타로의 금호타이어 매각은 주식 매매약정(SPA)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약 42% 상당의 채권단 보유 주식의 주인이 바뀌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 자체로는 금호타이어의 고용 승계에 관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은 주식매매가 완결되어 더블스타가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후이다.

소위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인수자는 인수 여부와 인

수 가격을 정하면서 인수 이후에 회사의 재무적 상황을 호전시킬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인수자가 별도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재정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검토하는 것이 공장 이전과 정리 해고이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이후 상황은 공장 이전과 정리 해고 혹은 인력 감축 등이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지난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된 2017년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니 2016년 상반기 약 600억원 상당의 흑자 영업이익이 올 상반기에는 약 320억원의 적자로 악화되었다. 1년 만에 얼마나 극심한 재정 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중국기업인 더블스타 입장에서는 인수 직후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당연히 재정 악화를 타개할 방안으로 광주공장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기업으로서 국내 공장을 줄이고 중국 현지 공장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광주 송정역 바로 인근에 위치한 약 130만평 규모의 광주공장 부지를 개발하여 분양할 경

우 그 수익규모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8000여억 원의 인수대금을 제시한 더블스타 입장에서는 인수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수익사업으로 광주공장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다. 공장부지 매각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42%의 최대주주가 독자적으로 강행할 수 없겠지만, 우리사주조합의 지분 비율이 0.02%에 불과한 금호타이어의 지배구조상 과연 공장부지 매각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이를 막아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장부지 매각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 해고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 해고는 ‘근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금호타이어의 급박한 매출이익 감소는 정리 해고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리 해고를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공장이전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 타지역으로의 이사 어려움 등을 이유로 회사가 금호타이어에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형태의 간접적 고용조정 방안이 추진되고 형식적 정리 해고자 규모 자체를 축소한다면 현행 판례에 비추어 정리

해고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저런 걱정이 들지만 문제는 뾰족한 대응책도 없다는 점이다. 최근 추가 하락 등을 이유로 무려 20% 가까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한 더블스타에게 과연 광주공장 현행 유지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더블스타에게 광주공장 문제를 강하게 요구할 채권단의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모처럼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광주공장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광주공장을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더블스타에게 제안할 동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알차리 지역특위라도 구성해서 역시라도 협상 당사자인 더블스타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지역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테이블로 이끌어내어야 한다.

광주공장의 연매출만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대표적일 항도기업인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을 허무하게 놓쳐서는 안 된다. 이미 작년 삼성 백색기전의 철수를 허무하게 보고만 있었던 기억이 있지 않은가.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고

‘동포 이민청’ 설립과 ‘귀환법’ 제정 시급하다



홍인하
전 광주시의원·국제학 박사

올해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고, 광복절 72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고려인은 안중근, 홍범도, 최재형, 김경천, 이동휘, 이상설, 이범윤을 비롯하여 대부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한인 고려인들이 항일 운동에 참여했고요. 일반 고려인들은 항일운동 참가자들에게 식량과 의복, 주둔지 등 모든 걸 제공해주었습니다.

고려인은 지금으로부터 155여 년 전 자발적으로 연해주로 이주해 살았습니다.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사나 싶을 때 고려인은 강제이주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입니다. 1937년 러시아인들은 스탈린 정책에 의해 고

려인을 일본 첩자로 몰아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게 했습니다. 그동안 연해주에서 가까스로 타전을 다진 고려인은 머나먼 땅으로 강제이주를 당했습니다. 그 해 추위와 풍토병으로 많은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고려인들이 88올림픽 이후인 30여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광주엔 10여 년 전부터 들어와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나라에서 살며 공부는 물론 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려인 대부분이 방문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살다가 방문 비자로 한국에 오다가 소문을 듣고 광주까지 왔으며 이들 대부분은 막노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양파를 수거하거나 배를 종이로 싸거나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려인이 재외동포로 인정된 것은 1999년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령에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1945년 정부 수립 이후)을 보유했던 자’로 제

한되어 있습니다. 1945년 정부수립 이전 해외국으로 간간 고려인을 1세로 간주하면, 고려인 4세는 지금 보통 20세 정도 되는데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는 외국인입니다. 법에 의하면 고려인 4세는 우리 동포가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3개월 단기비자로 대한민국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비자 취득 절차 개선, 귀환법 제정, 거주국 자유 왕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는 정착 지원 조례 제정, 지역 주민 간 소통, 한국어 및 기초생활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또 NGO는 고려인동포, 인권 보호 근로 및 법률 상담 지원,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법적 지원, 한국어 교육, 근로 복지, 생활 복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광주에서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난 3월 고려인 동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2005년부터 10여 차례 국회법 개정을 위한 시도를 했으나 정부의 강한

반대로 인해 부결되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전혜철 의원이 고려인 국내 정착법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스라엘과 독일처럼 ‘귀환법’을 제정해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외국국적 동포 전담기구로 동포·이민청을 만들어 외국 국적 동포와 한인, 이주 여성을 비롯한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 등을 컨트롤 하는 전담기구 설립도 절박합니다. 올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이하여 고려인을 비롯하여 한인 디아스포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구촌 곳곳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똑바로 서지 못했던 시절에 국외를 떠돌았던 우리 동포들. 그중에서도 고려인들이 희망한다면 대한민국에 순조롭게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9월 2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살ும்에 담아낸 아시아, 광활한 생명의 길’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칩시다. 많이들 오셔서 고려인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無等鼓

얼마 전 살충제 계란 파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을 당황케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살충제 계란의 위해성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정면충돌한 것이다.

“살충제 계란을 평생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지난 21일 식약처의 발표에 대해 바로 이튿날 대한의사협회 등이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심각한 해를 가할 정도로 독성을 가진 것은 아닌 게 맞지만, 무조건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특히 “(살충제 계란을)장기 섭취해

동물 보호 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 좋은 예다. 법원은 “법에 따르면, 전기가 흐르는 쇠조羹이로 동물을 감전시키는 행위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에서 ‘잔인’이라는 개념을 너무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동물 보호 단체들은 “동물 복지 수준을 최약으로 후퇴시킨 희대의 나쁜 판결”이라며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경남에서 지적장애 학생을 성매매 시키고 나체 영상까지 찍은 혐의로 구도 유해하지 않다고 단언한 정부 발표는 선부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지적까지 내렸다.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정부 발표’를 민간 전문가들이 단번에 부인해 버린 셈이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최근 들어 별로 낯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항의 집회나 판결 파기 운동까지 불사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전기가 흐르는 쇠조羹이로 개를 도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권위의 종언

속기소된 10대들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들은 ‘권위에 대한 불신·불만’ 때문이라기보다는 촛불 혁명을 통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뼈속 깊이 인식한 시민들이 수평적인 소통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 근거가 없거나 부실한 권위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할 수 없게 됐다. 권위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니, ‘권위의 종언’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듯하다. /홍형기 정치부장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